

민간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로에너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
<보도 내용 (한국경제, 6. 4) >

- ◆ “제로에너지로 지어라” 공사비 폭등 ... 내 집 마련 더 멀어진다.
 - 내년 탄소중립 시공 의무화에 따른 단열 강화,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공사비 최대 30% 증가, 원자재값·인건비 상승 겹쳐 평당 1000만원 시대 돌입 전망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03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금년부터 공공 공동주택 제로에너지인증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할 제로에너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- 언론에서 보도된 “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시 공사비 26~35% 상승”은 원자재 가격·인건비 상승,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상승요소를 최대치로 추정한 결과로 판단됩니다.
 - 현재 국토부와 민간 업계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로에너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유혜령 (044-201-3364)
	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사무관	정문희 (044-201-3365)